동아시아연구원(EAI)
「문재인정부 중간평가: 여론조사 및 후반기 정책과제」 발표

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임기 중반을 맞이합니다. 동아시아연구원(원장 손열)은 문재인 정부의 전반기 외교안보정책을 심층 분석하고 후반기 풀어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**2019년 11월 5일 화요일 저녁 6시 웨스틴조선호텔(The Westin Chosun Seoul) Cosmos & Violet 룸**에서 <문재인 정부 중간평가: 여론조사 및 후반기 정책과제>를 발표합니다. 외교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와 전문가 패널 토론으로 진행됩니다. EAI가 한국리서치와 함께 2019년 10월 24일부터 29일까지 1,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의 주요 사항을 첨부합니다.

- 모집단: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
- 표집틀: 한국리서치 액세스 패널(2019년 9월 기준 전국 45만여명)
- 표집방법: 지역별, 성별, 연령별, 학력별 기준 비례할당추출
- 표본크기: 1,000명
- 표본오차: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, 95%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±3.1%p
- 조사방법: 웹조사(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)
- 조사기관: (주)한국리서치

〈핵심요약〉

1. 문재인 정부 정책평가: 외교안보정책 4.6점 (10점 만점)

- 국정 전반 4.5점, 외교안보정책 4.6점으로 양자 간 차이 없이 낮은 평가를 받음.
- 구체적으로 북한정책 4.5점, 미국정책 4.6점, 중국정책 4.6점, 일본정책 5.0점으로서, 대일정책에 대한 점수가 비교적 높은 편임.

2. 한국인의 위협인식: 군사·안보적 위협 이상으로 중요해진 경제 위협

- 경제이슈에 대한 위기감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함. 주변국 간 군사적 경쟁과 갈등(48%), 불안정한 남북관계(49.8%)보다 주변국 간 무역/기술 마찰(54.3%)이 높은 비율로 나타남. 미중 무역/기술 마찰과 한일 경제 갈등이 높아진 최근의 상황이 반영됨.
- 미세먼지/방사능 등의 초국경적 환경문제에 대한 위협인식(35.4%)도 주목됨(20대를 중심으로).

3. 주변국 중 북한에 이어 일본과 미국에 대한 우려 높음

- 남북한 긴장완화 무드에도 불구하고 북핵/미사일 개발은 여전히 최대 위협요인. 뒤이어 아베정부의 군사대국화, 트럼프정부의 자국우선주의에 대한 우려가 부상.

4. 대일정책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 (5점)

-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한 맞대응 지지(66.6%),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지지(79.8%) 등 강경대응 기조를 지지. 강제동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양국 정북 대립하는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도 강경책 지지(일본기업의 보상조치) (42%).

- 그럼에도 불구하고, 정부는 악화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며(65.3%), 그 이유로 북핵 공조나 한미관계 등 안보적 사안보다는 경제적 타격(41.3%), 민간교류에 부정적 영향(34.8%) 등을 꼽고 있음.

5. 미중 관계 속 한국의 포지셔닝: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 거부, 택일해야 한다면 미국

- 미중 갈등 시, 기본적으로는 중립을 추구(69.9%)하지만, 굳이 선택하려면 미국임(24.4%). 중국만 선택하는 것(5.1%)은 회피함.
- 중국의 일대일로와 인도-태평양 전략이 충돌한다면, 미국 선택(26.7%), 양쪽 선택(23.6%), 양쪽 불참(23.6%), 중국선택(0.8%)으로 나타남.
- 중국은 비핵화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행위자(80%)이지만 중국의 부상을 위협으로 인식하고(66.9%), 신뢰도는 낮음.

6. 한반도 비핵화 실현 가능성에는 부정적인 전망

- 단기간 비핵화 실현 전망은 극소수(2.3%)인 반면,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응답은 35.6%, 비핵화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도 38.9%로 나타남.
-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신뢰한다 13.7%, 신뢰하지 않는다 64.6%로 부정적인 의견이 50.9%p 높음.

7. 여전히 중요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

- 주한미군 철수 8.5%, 축소 32.9%, 유지 39.8%, 확대 12.5%로 주한미군 주둔을 중시함.
- 한미 공동훈련 중단에 대해서는 중단 지지 31.6%, 중단 반대 61.1%로 한미 공동훈련 중단 반대의견이 높음.
-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88.9%, 적절하다는 의견이 11.1%이고,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감수하겠다는 의견이 32.1%, 감수할 수 없다는 의견이 61.2%로 나타남.
- 북미 수교에 대해서는 찬성 64.4%, 반대 19.5%로 북미수교 지지의견이 높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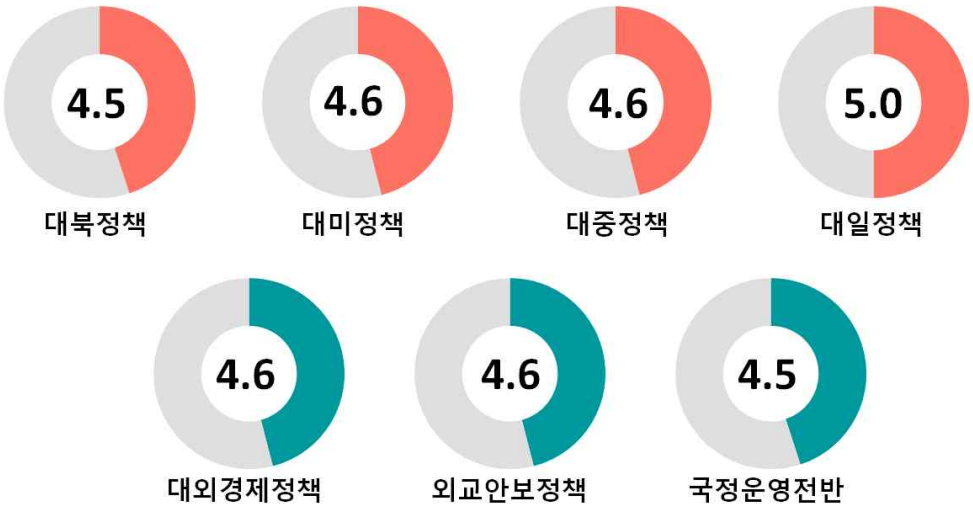
8. 문재인 정부 지지도, 40대와 광주/전라 지역.

- 60대와 70대의 부정적 평가, 30대와 40대의 긍정적 평가, 50대와 20대의 중간 의견으로 유형화 되었으며 특히 50대의 점수가 전체 평균 점수와 유사함. 지역은 광주/전라 지역의 점수가 높았으며, 이념성향은 진보, 중도, 보수 순으로 지지도가 높음.

문재인 정부 중간평가 여론조사 주요 결과

1.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: 국정전반 4.5점, 외교안보정책 4.6점 (10점 만점)

그림1.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 (10점 만점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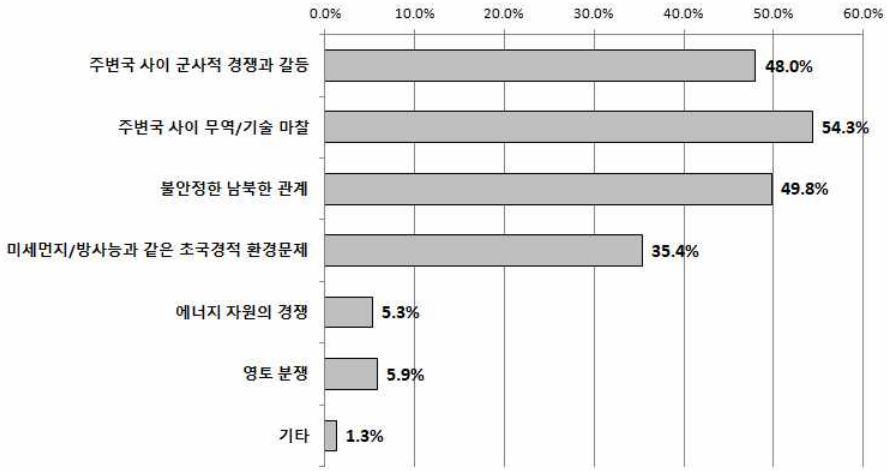
- 국정 전반 4.5점, 외교안보정책 4.6점, 대외경제정책 4.6점으로 대체로 낮은 평가.
- 국정 전반 평가와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평가가 대체로 일치하며 대일정책에 대한 점수가 평균 이상임.

2. 한국인의 위협인식: 군사 안보적 위협보다 더욱 중요해진 경제적 위협

- **경제 이슈에 높은 위기감**

- 한국이 당면한 위협으로 불안정한 남북관계(49.8%), 주변국 사이 군사적 경쟁과 갈등(48%) 보다 주변국 사이 무역/기술 마찰(54.3%)이 높은 비율로 나타남. 미중 간 무역마찰과 한일 간 경제 갈등을 겪은 까닭임. 또한, 미세먼지/방사능 등의 초국경적 환경문제에 대한 위협인식(35.4%)도 두드러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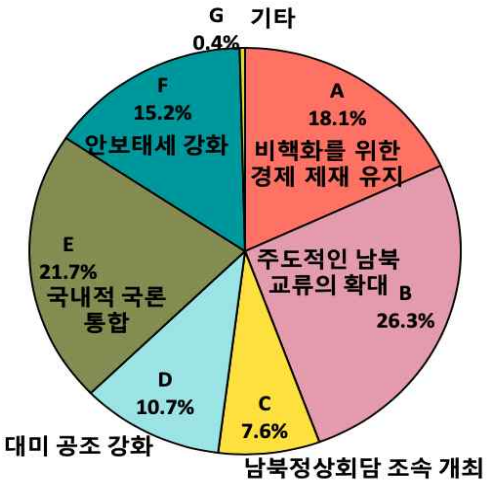
그림2.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협 요인(1+2순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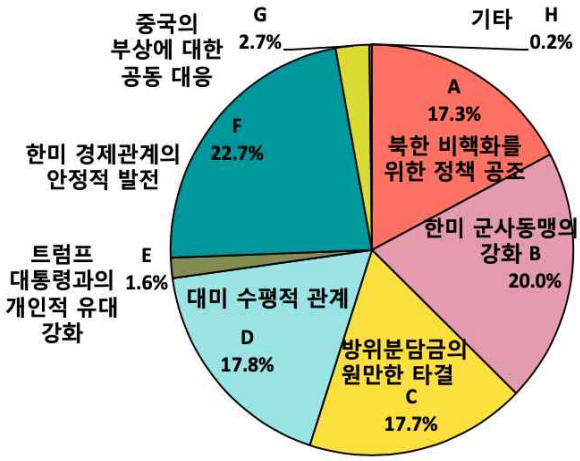
- **대외 정책에서 우선 고려해야 하는 이슈**
  - 대미외교에서 우선 고려해야 하는 이슈로 "한미경제관계의 안정적 발전"(22.7%)이 강조되어 한미군사동맹의 강화(20%)보다 2.7%p 높게 나타남.
  - 대중 외교에서 우선 고려해야 하는 이슈 역시 한중 경제 관계의 안정적 발전(36.2%)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정책 공조(23.8%)보다 높았음.
  - 대일외교에서 우선 고려해야 하는 이슈에서도 위안부 등 역사문제 해결(31.6%) 다음으로 수출규제 조치 등 양국 간 무역분쟁 해소(29.3%)로 경제이슈가 부각 되었음.

그림 3. 대외 정책에서 우선 고려해야 하는 이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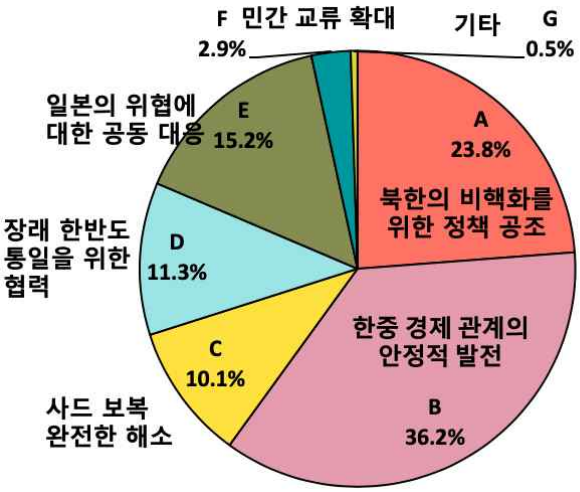
대북외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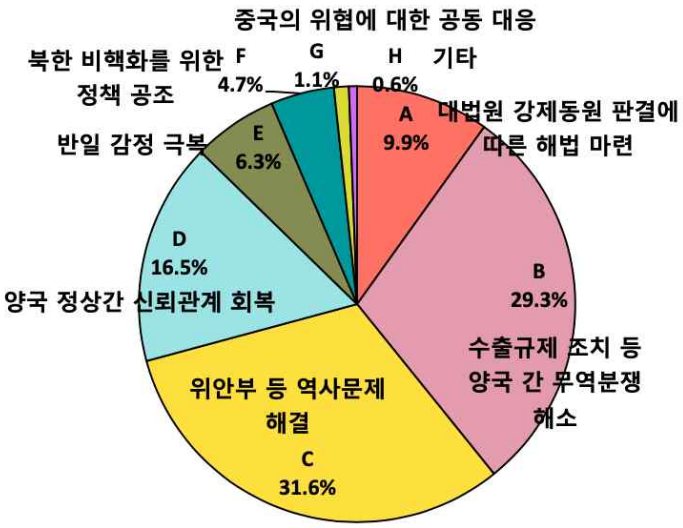
대미외교



대중외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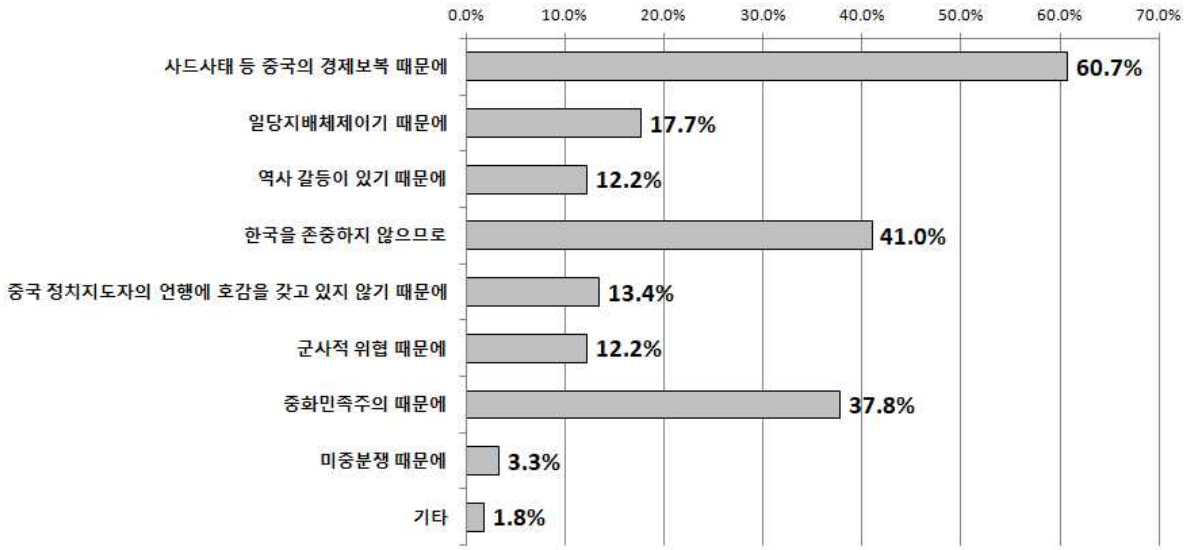
대일외교



- **중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갖게 된 이유: 사드 사태 등 경제보복 때문에(60.7%)**

-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은 거대시장으로 경제적 기회가 크기 때문(89.1%)이며,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진 이유는 사드 사태 등 중국의 경제보복 때문(60.7%)으로 모두 경제적 요인을 언급하고 있음.

그림 4. 중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게 된 이유(1+2 순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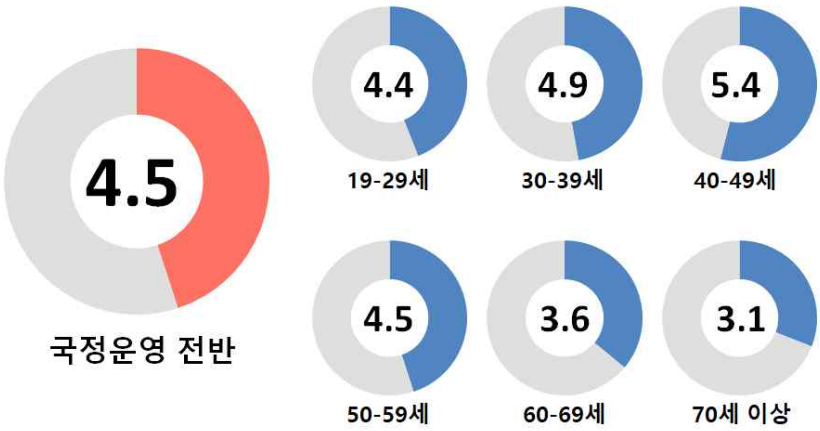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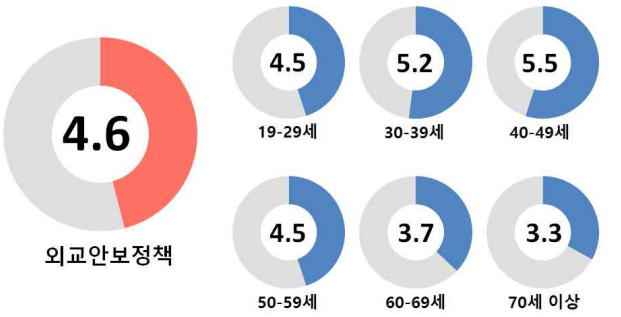
3. 40대, 광주/전라 지역의 지지도 높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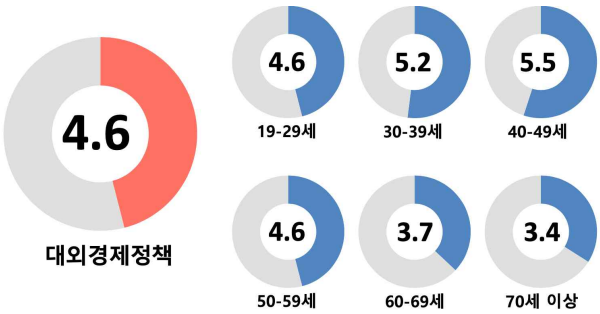
- **세대별 차이: 30-40대 vs. 60-70대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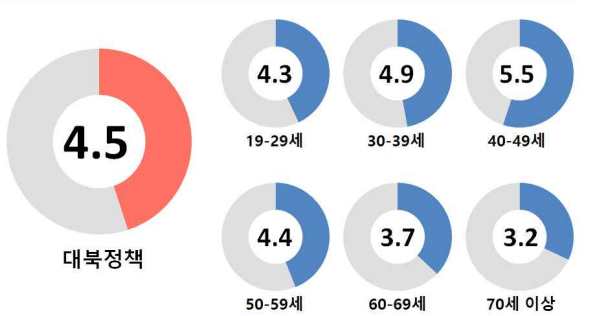
  - 60대와 70대의 부정적 평가, 30대와 40대의 긍정적 평가, 50대와 20대는 중간 의견으로 전체 평균 점수와 유사함. 지역은 광주/전라 지역의 점수가 높았으며, 이념성향은 진보(6.2), 중도(4.3), 보수(2.8) 순으로 국정 운영 및 외교정책 지지도가 높음. 이념성향은 진보(6.2), 중도(4.3), 보수(2.8) 순으로 국정 운영 및 외교정책 지지도가 높음(괄호 안은 국정운영 전반점수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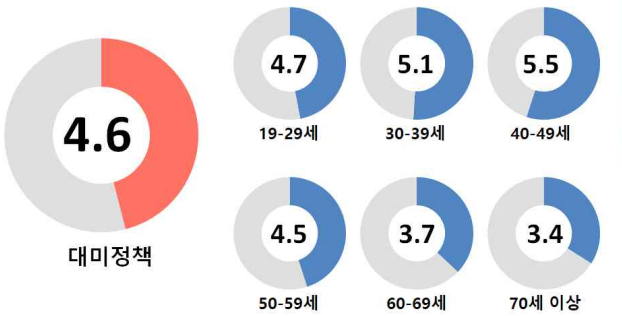
그림 5. 세대별 정책 평가 (10점 만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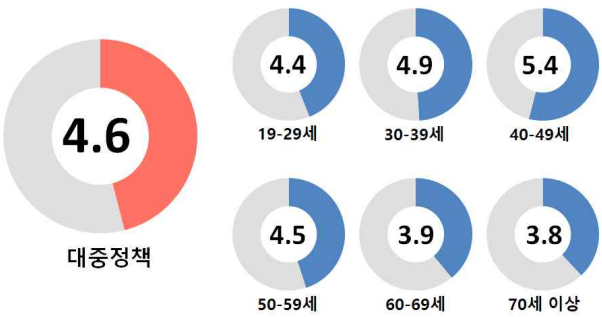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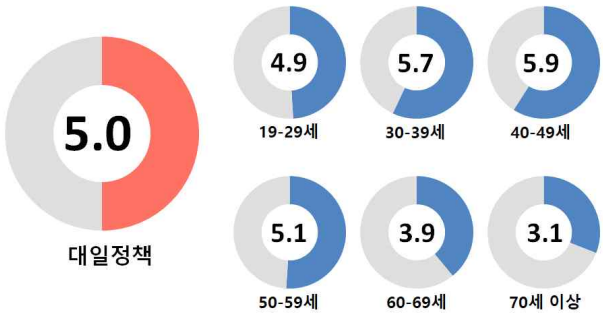

4.6
외교안보정책
4.5
19-29세
5.2
30-39세
5.5
40-49세
4.5
50-59세
3.7
60-69세
3.3
70세 이상


4.6
대외경제정책
4.6
19-29세
5.2
30-39세
5.5
40-49세
4.6
50-59세
3.7
60-69세
3.4
70세 이상


4.5
대북정책
4.3
19-29세
4.9
30-39세
5.5
40-49세
4.4
50-59세
3.7
60-69세
3.2
70세 이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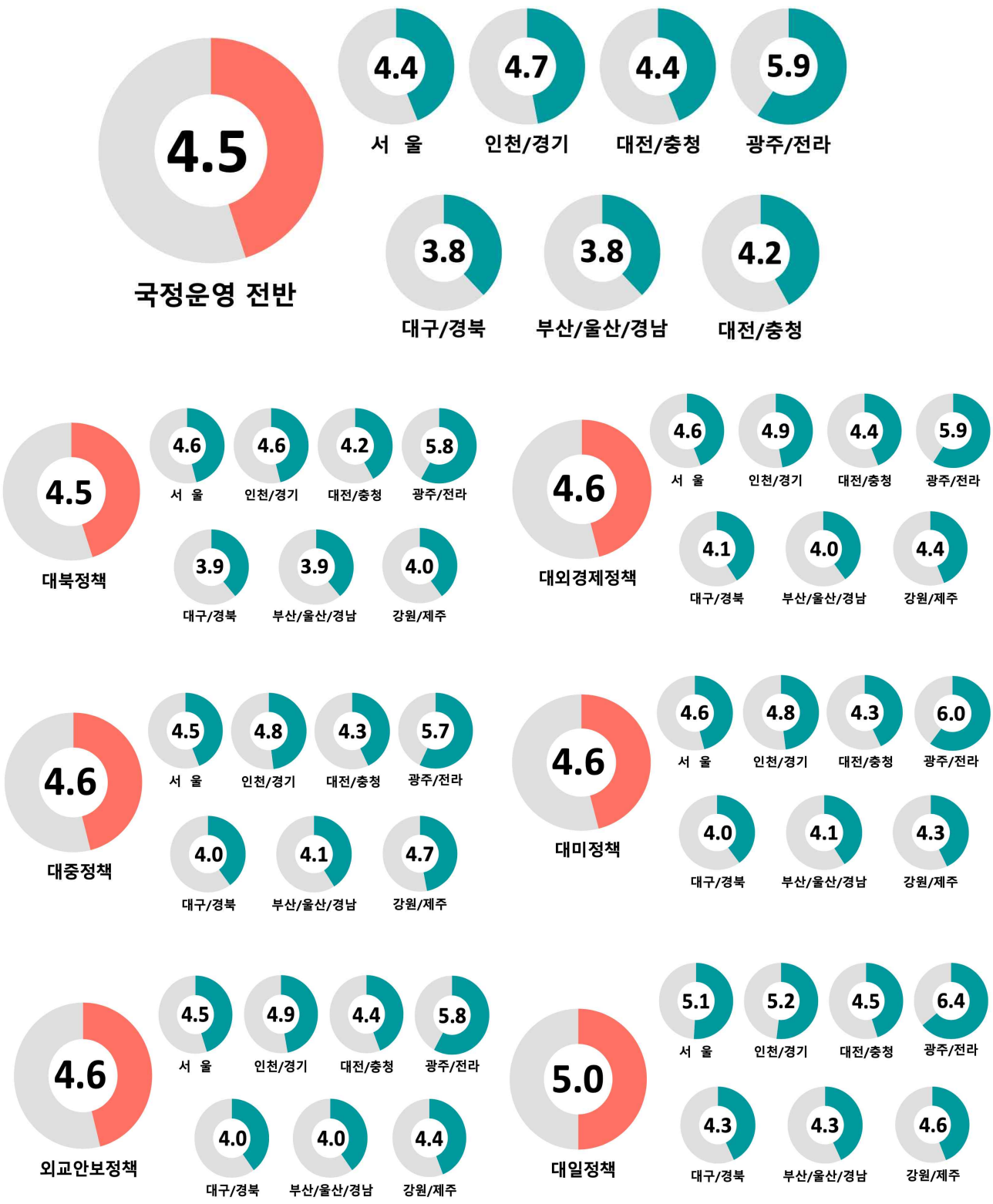

4.6
대미정책
4.7
19-29세
5.1
30-39세
5.5
40-49세
4.5
50-59세
3.7
60-69세
3.4
70세 이상


4.6
대중정책
4.4
19-29세
4.9
30-39세
5.4
40-49세
4.5
50-59세
3.9
60-69세
3.8
70세 이상


5.0
대일정책
4.9
19-29세
5.7
30-39세
5.9
40-49세
5.1
50-59세
3.9
60-69세
3.1
70세 이상

- **지역별 차이: 호남/광주 vs. 영남/부산**

그림 6. 지역별 정책평가 (10점 만점)



4. 상대적으로 높은 대일정책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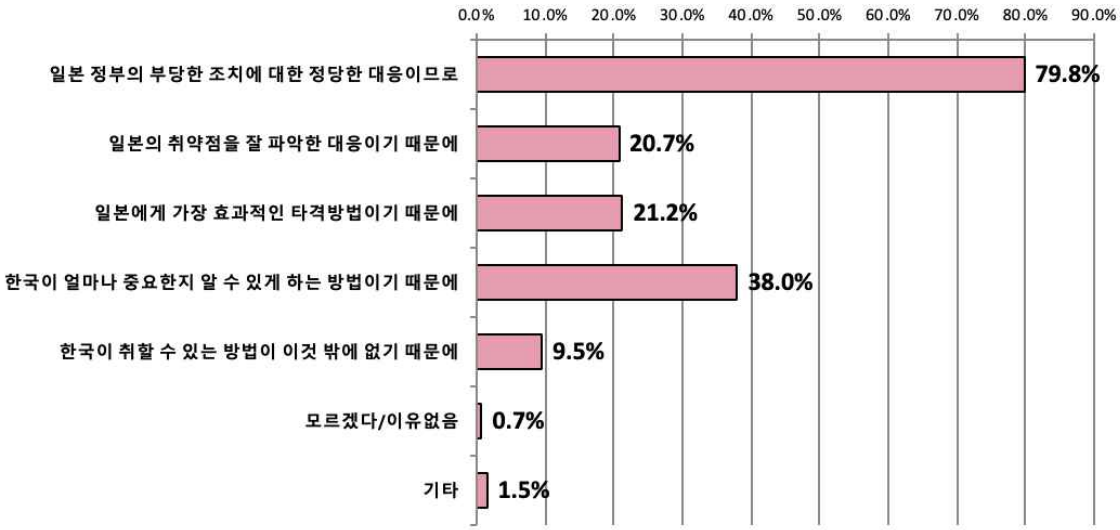
- 일본에 대한 정책이 다른 국가에 대한 정책보다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음.
-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응(5.3점), 징용문제 대법원판결에 대한 대응(5.3점),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(5.6점), 지소미아 종료결정(5.8점)으로 보통을 상회하는 점수를 보임(그림7).

그림 7. 일본 정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과 태도(10점 만점)

- **상대적으로 높은 이유? 부당함에 대한 정당한 조치로 인식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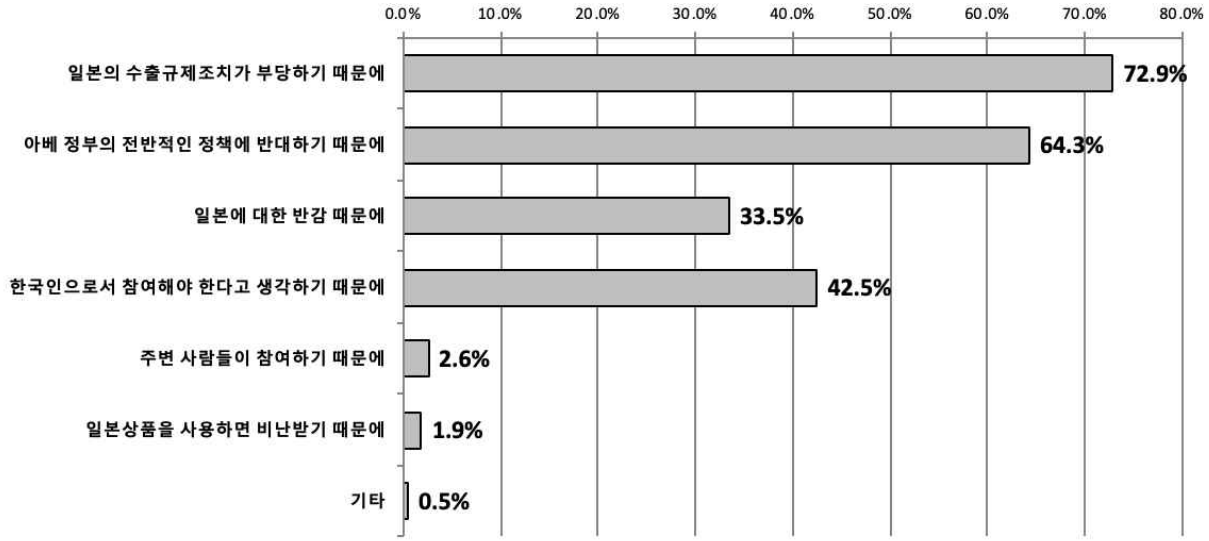
- 일본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응(수출규제, 66.6% / 지소미아 종료 79.8%)로 나타남. 지소미아 종료결정을 지지한다는 60.3%, 반대는 18.9%로 나타남.

그림 8. 지소미아 종료 지지 이유



-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이유는 징용문제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대한 보복(50.5%) 때문이라고 보는 의견이 많으며, 한국의 불매운동을 지지(77.5%)하는 의견이 높음. 불매운동 참가 품목(복수응답)은 식품(맥주, 일식)이 86.6%, 관광이 77.5%, 의류 76.6% 등으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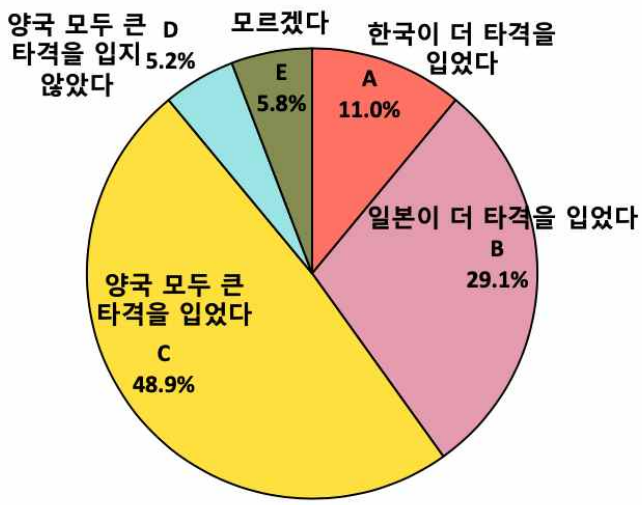
그림 9. 불매운동지지 이유



- **한일 간 경제 갈등의 영향에 대한 인식과 미디어**

- 최근 한일 간 경제 갈등으로 '양국 모두 타격을 입었다'(48.9%)는 인식 다음으로, '일본이 더 큰 타격을 입었다'(29.1%)가 '한국이 더 큰 타격을 입었다'(11%) 보다 높게 나타남.
-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'TV, 신문 등의 보도가 공정하다'(25.9%), '공정하지 않다'(61.6%)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반면 인터넷상의 의견에 대해서는 '한국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'는 의견이 60%, '그렇지 않다'는 의견이 29.9%로 인터넷 매체를 통한 의견 수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.
- 한일 경제 갈등으로 인한 일본 내 경제 타격에 대한 보도가 존재하는 반면, 한국 내 경제 타격에 대한 보도는 찾기 어려움. 한일 간 경제 갈등으로 인한 국내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언급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, 일본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 것인지 다양한 심층 보도 및 분석이 필요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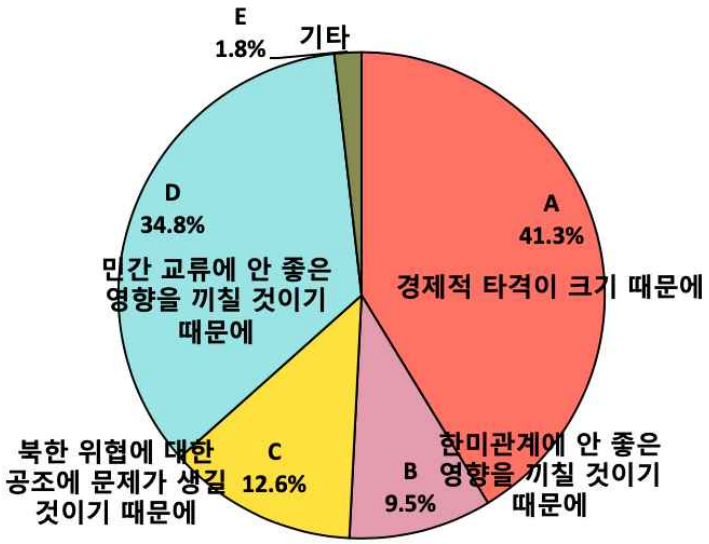
그림 10. 한일 간 경제 갈등의 영향



- **한일관계의 미래: 정부 간 영역과 민간영역의 디커플링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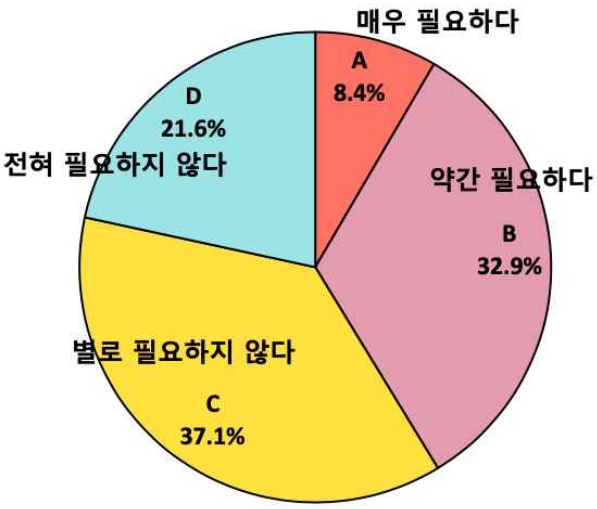
- 미래의 한일관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의견은 33.2%, 긍정적인 의견은 28.5%보다 높음.
- 그러나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(65.3%), 그 이유는 경제적 타격이 크고(41.3%), 민간교류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하는 의견(34.8)이 있음.

그림 11.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



- 향후 한미일 공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, 일본의 자위대가 한국 방어에 나서는 것에는 적극 반대함(72.9%). 일본의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의 역할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(58.7%)이 높음. 필요하다는 의견은 41.3%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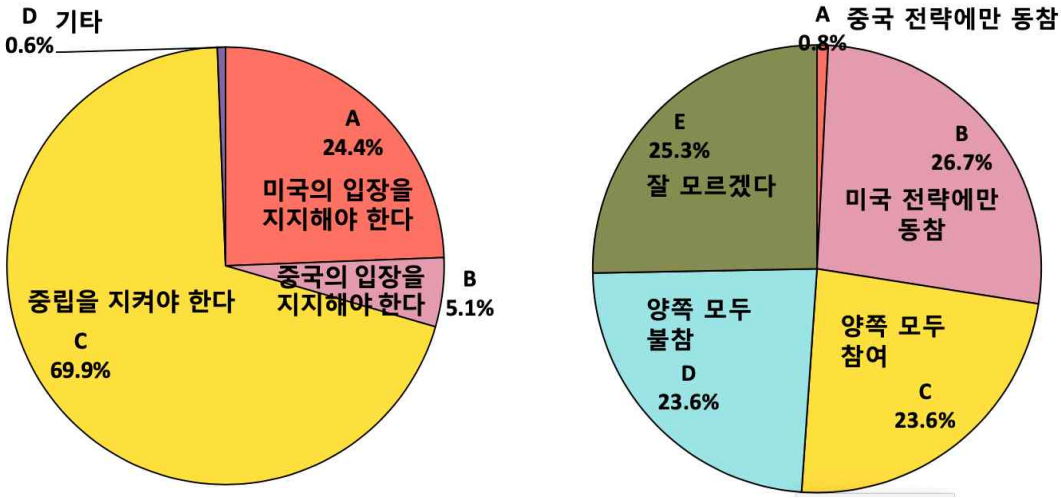
그림 12.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일본의 역할



5. 미중관계 속 한국: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, 택일해야 한다면 미국

- 미중 갈등 시, 기본적으로는 중립을 추구(69.9%)하지만, 굳이 선택하려면 미국임(24.4%). 중국만 선택하는 것(5.1%)은 회피하려고 함.
- 비슷한 질문으로, 중국의 일대일로와 인도-태평양 전략이 충돌한다면, 미국 선택(26.7%), 양쪽 선택(23.6%), 양쪽 불참(23.6%), 중국선택(0.8%)으로 나타남.
- 중국은 비핵화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행위자(80.0%)이지만 중국의 부상을 위협으로 인식하고(66.9%), 신뢰도는 낮음.

그림 13. 미-중 갈등 시 한국의 선택



6. 한반도 비핵화 실현 가능성에는 부정적인 전망

- 비핵화 실현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응답은 35.6%, 비핵화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38.9%로 나타나 부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임.
-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'신뢰한다' 13.7%, '신뢰하지 않는다' 64.6%로 부정적인 의견이 50.9%p 높음.

그림 14. 한반도 비핵화 실현 가능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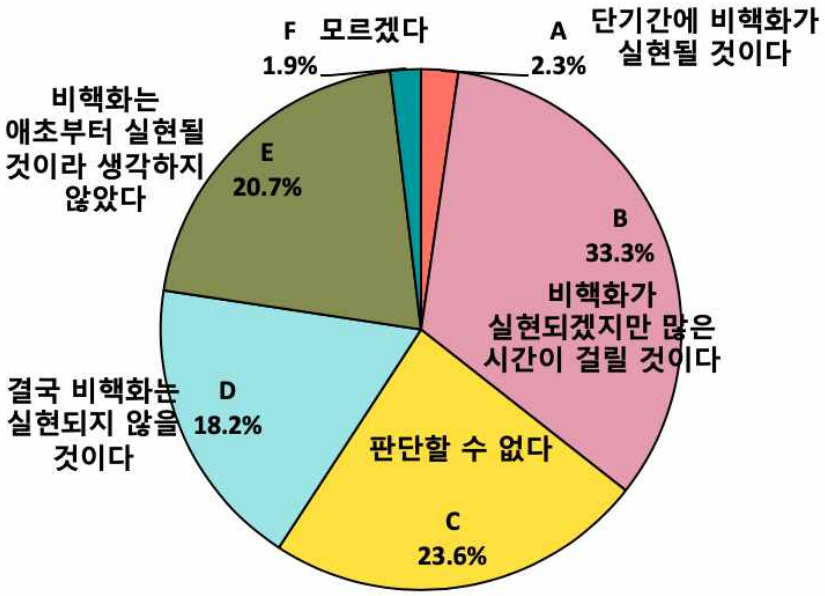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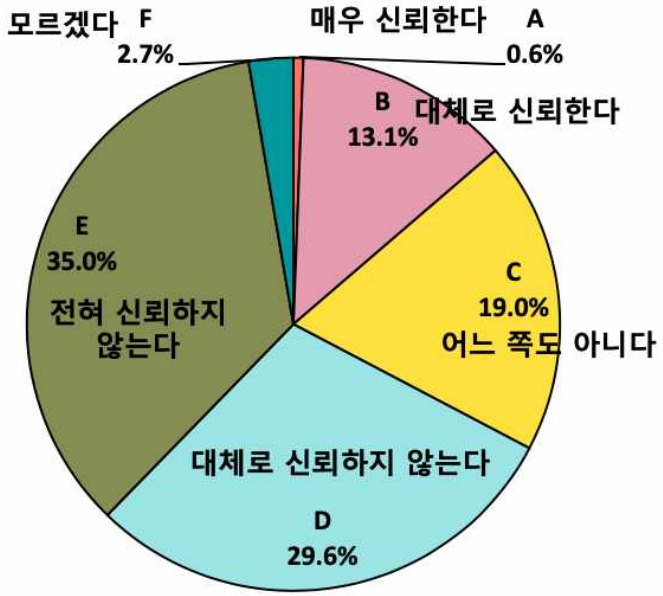


그림 15.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신뢰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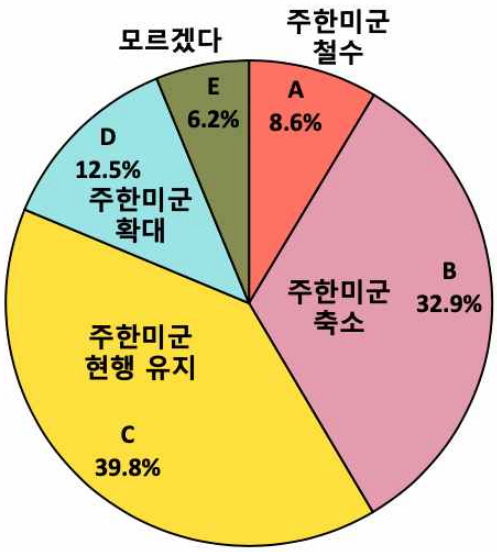


7. 여전히 중요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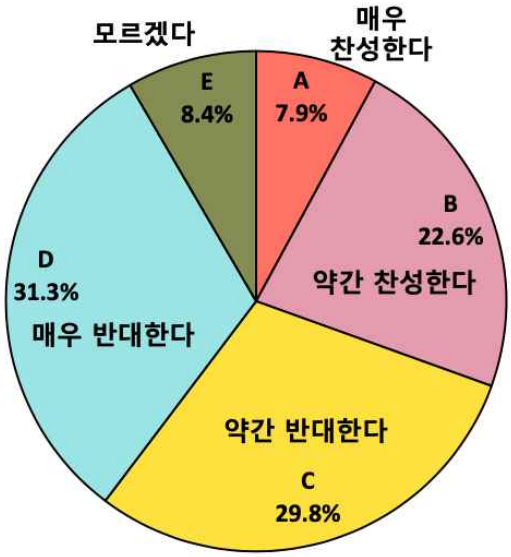
- 주한미군 철수 8.5%, 축소 32.9%, 유지 39.8%, 확대 12.5%로 주한미군을 중시함.
- 비핵화 진전을 위한 한미공동군사훈련 중단에 대해서는 중단지지 31.6%, 중단 반대 61.1%로 한미공동군사훈련 중단 반대의견이 29.5%p 높음.
-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88.9%, 적절하다는 의견이 11.1%이고,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감수하겠다는 의견이 32.1%,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61.2%로 나타남.
- 북미 수교에 대해서는 찬성 64.4%, 반대 19.5%로 북미수교 지지의견이 높음.

그림 16. 한미동맹 관련 의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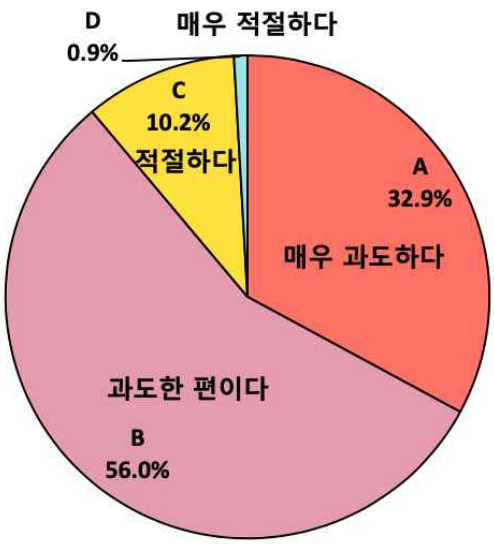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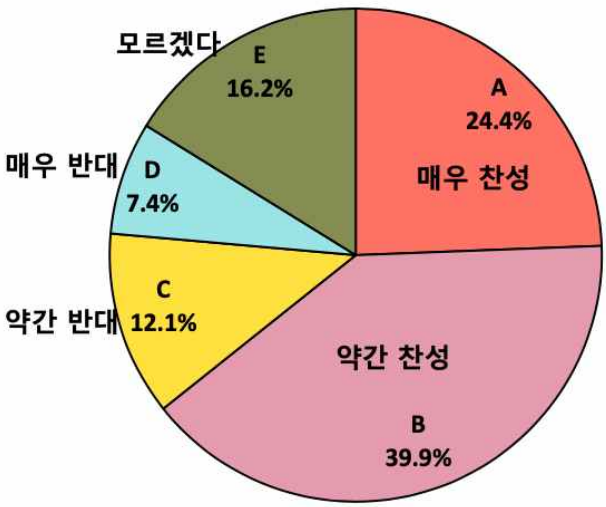
Q. 주한미군의 미래



Q. 한미공동군사훈련 중단?



Q. 현재 미국의 방위비 분담요구



Q. 북미수교